

---

---

제2차 <한일 변호사 공동 심포지엄> 인사말

‘과거사 청산 통해 한일간 새로운 미래를’

---

---

2010. 12. 11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 용 섭 (민주당)

---

---

제2차 <한일 변호사 공동 심포지엄> 인사말

‘과거사 청산 통해 한일간 새로운 미래를’

---

---

2010. 12. 11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 용 섭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용섭입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과 사회정의 수호’를 내걸고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주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인사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측과  
특히 앞서 인사말씀 해 주신

타카기 미츠하루 일변연 부회장님, 양삼승 대한변협 부협회장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일본은 대한민국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였습니다.

양국은 그간

한편에서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교류를 이루면서  
발전해 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없는 고통과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일 양국은

과거 ‘애증의 관계’에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할 ‘친구의 나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양국이 서로 힘을 합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해야 함은 물론

세계 역사를 함께 써 나가야 할 중요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이 역사와 시대의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적 진실을 존중하는 '양심'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자, 미래를 창조하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  
대한민국이 독립된 지 65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제강점기 하에 강제동원되어 전쟁터로, 노역장으로, 군 위안소로 끌려가  
재산과 인권을 침해당한 대한민국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그 한맺힌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미 사망했으며  
남아있는 팔순 고령의 생존자들도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가난과 눈물 속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 민주당 내에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의원연맹>이 결성되어  
정치인들이 과거사 해결에 나서고 있고,  
일제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나고야 소송지원회>를 비롯한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가 하나 들쭉 늘어나고 있으며,  
<일본변호사연합회>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모여  
희망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동안 일본은  
패전국가에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으로써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일제 피해자들에게  
'그에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 정부와 재판소도

“1965년 한일협정은 국가 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만을 소멸시킨 것일 뿐 일본 정부나 개별 기업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 변호사님들께 세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일제피해자 지원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장학사업, 기념사업, 역사적 홍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알려진대로

1965년 당시 일본이 한국 정부에게 지급한 청구권 자금은

당사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종자돈’으로 쓰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 대신

대한민국 정부와 일부 기업들이 그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한국의 사법부도,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에게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 정부, 일본의 가해기업, 한국의 수혜기업’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과거사 청산의 길은 분명히 열려있습니다.

저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가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 후에 맺었던 '독일과 프랑스간 협정'도  
우리의 1965년 한일협정과 유사한 '포괄협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프랑스의 지속적인 추가 보상 요구를 독일이 수용하여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일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한국과 일본 정부, 일본의 기업과 한국의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하여 일제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자'는 요지의 법안을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과거사 청산'에 대해 연구해 온 양국의 학자들이나 피해자들이  
'가장 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방안이 바로  
'지원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한일 양국의 양식있는 지식층을 중심으로 긍정적 여론이 모아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한  
일본 '미쓰비시 증공업'과 한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간에 친행 중인  
'보상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십수년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벌인 모든 소송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결국 최종 패소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최근 한국의 '아리랑 3호' 발사 용역을 수주하는 등 한국에서 여전히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방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쓰비시처럼 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민을 동원하여 발전한 기업들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의 이번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

세계적 기업인 미쓰비시에게도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미쓰비시와 협상중인 할머니들은

한평생 받은 고통과 노환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형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상을 해드려 이 분들이 편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의 '후생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본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은 당시에 후생 연금을 납입했음에도

일본 군인·군속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에는, 재판에서 패소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일본의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고작 한국의 라면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엔'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 65년 전에 납입한 금액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99엔' 그대로 지급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후생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제대로 된 탈퇴수당을 조속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잘못된 과거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 할 것이 아니라  
양심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선례에 따라  
성의를 다 해 '과거사 청산'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이 책임있는 태도를 통해 '과거사'라는 짐을 내려놓는 날,  
'진정한 이웃'으로서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앞으로도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관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는 데  
나름의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뜻 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일 변호사협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 용 섭(민주당)



---

---

第2回<日韓弁護士共同シンポジウム>ご挨拶

「過去史の清算を通じ、日韓の新しい未来を」

---

---

2010年 12月 11日



大韓民國 國會議員

李 庸 燮 (民主党)

皆様！

大韓民国国会議員の李庸燮と申します。

<日本弁護士連合会>と<大韓弁護士協会>が

「人権と社会正義の守護」をテーマに

日韓の過去史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シンポジウムを主催されること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本日この意義深い席で

ご挨拶を申し上げる機会を与えてくださった主催側と

日弁連の高木光春副会長、大韓弁協の梁三承副協会長にも

御礼申し上げます。

過去の歴史を振り返りますと、

日本は韓国にとって「最も近くて遠い」国でありました。

両国はこれまで

一方で、経済・社会・文化など、多様な分野で交流しながら発展してきましたが、

他方で、日本は韓国国民に限りなき苦痛と深い傷を残しました。

しかし、今や日韓両国は

過去の「愛憎関係」から

未来に向けて共に歩んでいく「親友の国」へと

関係を発展させていくべき重大な時点に差し掛かっていると思います。

また、両国は力を合わせ

北東アジアの平和と繁栄に資することはもちろん、

世界の歴史を共に書き進める重要な責務を負っています。

しかし、両国が歴史と時代のパートナーになるためには  
何より歴史的な真実を尊重する「良心」と  
それを支える「実践」が必要であります。  
過去は現在の鏡であり、未来を創造する根本であるからです。

ご承知のように、今年の日韓強制併合100年、  
大韓民国が独立して65年にあたる歴史的な年であります。

しかし残念ながら  
日本統治時代に強制動員され  
戦場へ、労役の場へ、軍の慰安所へとつれていかれ  
財産や人権を侵害された韓国人被害者は  
現在に至るまで、そのむごい歳月に対する補償を受けられずにいます。  
多数の被害者がすでに死亡し  
生存している高齢の被害者も  
残り少ない余生を貧困と涙で送っているのが現状です。

幸い、日本の民主党内に「戦後補償を考える議員連盟」が結成され  
政治家の方々が過去史問題の解決に向けて動き出しました。  
また、日本統治時代の被害者の訴訟を支援する<名古屋訴訟支援会>をは  
じめとする日本の良心的な市民団体が増えているだけでなく  
<日本弁護士連合会>など各界の声が集まり  
前向きな兆しが見えつつあります。

日本は  
敗戦国から世界第2位の経済大国に成長しました。  
日本には、戦争の傷に喘いでいる韓国の被害者に対し  
「相応の」補償や支援を充分に行える能力があります。

最近、日本の政府と裁判所も

「1965年の日韓協定は、国としての外交的な保護権だけを消滅させたに過ぎず、日本政府や個別企業の責任が終わった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表明しました。

本日、私はこのような状況を考慮し

両国の弁護士の方々に三つのお願いを申し上げます。

第一に、「日本統治時代の被害者を支援する財団」を作り被害者に対する補償と支援、奨学事業、記念事業、歴史的な広報事業などを持続的に行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えます。

ご承知のように

1965年当時、日本が韓国政府に支給した請求権資金は

当事者である被害者への補償ではなく

韓国の「経済発展の資金」として使われました。

多数の被害者の代わりに

韓国政府と一部の企業がその資金の恩恵に預かったのです。

最近では韓国の司法部も請求権資金の受益企業に対し、

「企業の社会倫理的責任を尽くすよう」強く求めています。

従って、「日韓両国の政府、日本の加害企業、韓国の受益企業」の

全ての当事者に「志」さえあれば

過去史を清算できる道は確かに開かれています。

私は「ドイツとフランスの例」が良き教訓であると思えます。

第二次大戦後にドイツとフランスの間で結ばれた協定も  
1965年の日韓協定のような「包括協定」でありました。  
それにも関わらず  
被害国であるフランスの持続的な追加補償の要求をドイツが受け入れ、  
「記憶・責任・そして未来財団」が設立され  
被害者支援など、加害者としての責任を果たすことに  
積極的に乗り出しました。

私はこのドイツの例をモデルに  
「韓国と日本の政府、日本の企業と韓国の請求権資金受益企業が基金を出  
捐し、韓国人被害者を支援する財団を作ろう」という旨の法案を  
韓国国会に発議しました。  
長い間「過去史の清算」問題を研究してきた両国の学者や被害者が  
「最善」であると声を一つにしたのが、  
この「支援財団を作る」ことであります。

実際にこの法案が韓国の国会を通るには、  
たくさんの難関が待ち構え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しかし国民の共感と  
日韓両国の良識を持つ知識人を中心に、前向きな世論が形成されれば  
充分可能なことであると思います。  
皆様、ご尽力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第二に、太平洋戦争で韓国国民を最も多く強制動員した  
日本の「三菱重工業」と韓国の「勤労挺身隊おばあさん」たちの間で  
行われている「補償に関する交渉」が速やかに成立できるよう  
ご関心とご支援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十数年間、勤労挺身隊被害者が  
三菱重工業を相手に起こした全ての訴訟は  
「日韓請求権協定」を理由に、結局敗訴しました。

三菱重工業は最近、韓国の「アリラン3号」発射用役を受注するなど  
現在も韓国で多大な経済的利益を得ています。

それにも関わらず

その社会的な責任に対しては顔を背けてきたのが事実です。

しかし三菱重工業のように戦時中に韓国人を動員して発展した企業が  
より成長していくためには、「大きな心」を持つことが必要です。

勤労挺身隊おばあさんたちとの今回の交渉が良い方向で成立すれば  
世界的な企業である三菱重工業にとっても  
企業のブランド価値を高められるよきチャンスとなるでしょう。

誠に残念ながら

今三菱重工業と交渉中のおばあさんたちは

一生苛まれた苦痛と歳月によって健康がそれほど芳しくない状態です。

あまり時間がありません。

生きているうちに補償をしなければ、

おばあさんたちは安らかな死を迎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日本弁護士連合会>の皆様、

この問題にも持続的なご関心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第三に、韓国国民の「厚生年金」に関する問題です。

日本によって強制動員された被害者は

当時の厚生年金を納入したにも関わらず

日本軍人・軍属以外は今まで一銭も支給されていません。

昨年9月、裁判で敗訴した勤労挺身隊おばあさんたちに

日本の厚生労働省は「厚生年金脱退手当」として

今の韓国ではラーメン一杯の半値にも及ばない

「99円」を支給するよう、判決が下されました。

日本政府は  
強制動員された被害者に、物価上昇などを全く考慮せず  
65年前の納入金である「99円」をそのまま支給したことで  
韓国国民の自尊心を傷付けたことに対し謝罪し、  
厚生年金加入者全員に  
まっとうな脱退手当を速やかに支給するべきであると思います。

私は、日本政府が  
間違った過去史を美化したり、正当化するのではなく  
良心と国際社会で通用する普遍的な先例に従い、  
誠意を持って「過去史清算」に乗り出すことを切に望んでおります。

日本が責任ある行動を通じ、「過去史」という重荷を下ろすとき  
「真の隣人」としての日韓両国の新しい未来は切り開かれるでしょう。

最後に、  
私はこれからも日韓両国が過去史問題において心を開き  
「真の和解と協力のパートナー関係」を築くことができるよう  
力の限りを尽くしたいと思います。

改めまして、この場にお招き下り  
発言できる機会を与えてくださった  
日韓弁護士協会の皆様に心より御礼申し上げます。

御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10年 11月 11日

大韓民国 国会議員 李庸燮 (民主党)